

# 적반하장 민노총... 정부에 “집회 참가자 감염경로 밝혀라”

민주노총 “감염원인 ‘집회’ 인식 심어 정부발표 부적절... 갈등상황 유발”  
김부겸 총리 “수차례 자제 요청에도 대회 참석, 확진자 발생에 유감”



‘7.3 전국노동자대회 정부 대응방침 규탄 민주노총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방역지침 준수 발언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뉴스1

민주노총이 집회 참가자 3명의 확진자 발생에 사과하면서도 정부에 “정확한 감염경로 규명”을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민주노총은 확진자의 감염 경로가 지난 3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가 맞는지 충분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민주노총 집회에서 확진자가 나오자 깊은 유감을 표했다.  
18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국노동자

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을 17일 확인했다.  
민주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시기를 지나는 지금, 많은 고통을 감내하며 코로나 종식을 위해 애쓰고 헌신하는 분들과 관심 있게 이를 지켜보는 많은 분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7월 3일

대회 참가자들에게 조속하게 선제적 검사를 받을 것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집회 주최 측 추산 8000여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후 집회 참가자 가운데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역학조사 결과 3명 모두 민주노총의 집회 참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17일 집회 참가자 전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반면, 민주노총은 3명 확진자의 감염 경로가 전국노동자대회인지는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일반적인 잠복기를 경과하는 시점에서 나온 대회 참가자의 양성 판정 결과를 가지고 마치 7월 3일

대회가 주요 감염원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기에 충분한 발표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코로나 4차 대유행에 대한 마녀사냥과 다름없으며 향후 심각한 갈등 상황을 유발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부겸 총리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집회 참석자 전원에게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가까운 선별검사소를 찾아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 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한 가운데, 수차례 자제를 요청드렸던 지난 3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의 참석자 중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에 대해 코로나19 중앙안전대책본부 본부장으로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 확진자 주말 최다 1454명... 비수도권 ‘비상’

비수도권서 전체 확진자 30% 발생  
전역에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 통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주말에도 1400명대를 넘기며 주말 기준 최다치를 기록했다. 비수도권에서 전체 확진자의 30% 이상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비수도권 전역에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를 통일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454명 발생했다. 토요일 기준 기존 최다 규모였던 1324명을 뛰어넘으며 주말 최다치를 경신했다. 주말인 것을 감안하면 위협적인 숫자다.  
4차 유행이 확산된 이후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12일째 1000명대를 넘어서

난 6월22일 이후 26일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외 지역에 동일하게 사적모임을 4인까지만 허용하는 방역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금은 바이러스 전파속도보다 한발 앞선 방역이 꼭 필요하다”며 “내일부터 수도권의 지역에서도 사적모임 허용 4인까지로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방역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한 지 일주일이었으나 좀처럼 확진자가 줄고 있지 않다며 “남은 1주일 동안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방역에 집중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 독도 영유권 주장, 외교관 망언에 文 대통령, 일본방문 ‘적신호’

靑 “확정된 것 없어... 모든 가능성 염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8일 오후 문 대통령의 방일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확정된 것은 없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열린 자세로 임하고 있다”며 “회담 성과에 대한 일본 측의 성의 있고, 전향적인 답변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적신호가 켜진 분위기다. 일본 방위성에서 17년 연속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주한일본대사관 소속 외교관의 한국 정부 대일(對日) 외교에 대한 ‘성적 표현’ 비판이 문 대통령의 방일 논의에 ‘악재’로 작용하면서다.  
청와대는 도쿄올림픽이 오는 23일 개막하는 만큼 내주 초까지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 여부를 지켜본 뒤 문 대통령 방일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본지와 통화한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주일대사관 소속 외교관의 대일 외교 비판 발언이 문 대통령의 방일 여부에 영향을 끼칠지 여부에 “지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일대사관 소속 외교관의 ‘성적 표현’ 비판 발언에 “외교부가 입장을 냈고, 여러 조치까지 했기 때문에 청와대까지 나서서 대응할 것은 아니다. 문 대통령 방일 여부를 결론 내는 시점이 도쿄올림픽 개막부터 역산하면, 조만간 결정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도 같은 날 본지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방일 여부에 대해 ‘결론이 났다’고 말하기 전까지(계속해서 정부는 일본 측 변화를 요구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일본 정부가) 변화 있는 태도를 보여주길 촉구한다”며 “문 대통령의 방일 여부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에서는 ‘수출 규제 철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협정 정상화’ 등이 한·일 정상회담 의제로 논의의 중이라고 보도한다. 반면 청와대는 일본 언론 보도까지 포함해 ‘확정된 사안은 없다’라는 입장이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 온·오프라인 맞춤형 개인쇼핑몰 창업

### 창업비용 99만원

나만의 맞춤형  
개인 쇼핑몰 제공 평생 수익 창출

200여개 홍삼제품  
+3만여개 인기상품  
+자체상품 등록 판매가능

25년 역사 브레인 TV 방송국소유 핫터그룹

대한홍삼주식회사/㈜핫터라이프 T.010-4480-0045

## 흡입형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 속도

>> 1면 ‘셀트리온 렉키로나’서 계속

셀트리온은 이와 함께 현재 정맥주사 형태인 렉키로나와 별개로 흡입형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셀트리온은 관련 특허 및 기술을 보유한 미국 소재 바이오기업인 ‘인할론 바이오파마’와 렉키로나의 새로운 투여 옵션으로 흡입형 렉키로나 개발에도 착수했다. 인할론은 지난 6월 흡입형 렉키로나의 임상 1상 개시를 위해 호주 윤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임상 2상에서 유효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흡입형 렉키로나는 기도 점막에 항체를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가정에서도 손쉽게 흡입기를 통해 렉키로나를 투여함으로써 코로나19 환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현재까지 유행한 주요 변이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중인 델타 변이와 람다 변이에 대해서도 렉키로나의 효능을 입증했다”며 “향후 발생하는 변이에도 지속적으로 중화 능력을 평가하고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다양한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흡입형 렉키로나 개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